

양극화에 박탈감 커진 韓... 규제개혁 통해 불황 늪 극복해야

경제 재도약 '해법'

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가계·기업부채 3600조원 육박

전문가들 "올 정책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불황극복으로 옮겨야"

"세계적으로 공급사슬 재편 추진
규제개혁으로 역동성 확보 필요"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룬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

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거시경제 안정관리

-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중심 정책 금융 확대 495 → 540조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8% →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이상, 법인 12% → 6%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주담대 허용 LTV 30%
- 한전·가스공사 적자 4년내 해소 → 요금 단계적 인상
-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 → 회사채·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지원

-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버스, 전철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80% 소득공제 6개월 연장
- '빌라왕 사건' 구제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 가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주택 기준 상향 3억→4억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 미래 먹거리 확보 '신성장 4.0' 프로젝트 가동
- 무역금융 규모 확대 351 → 360조원
- 투자증가분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 일괄 10%
-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8000원 → 32만2000원
- 장애인연금 월 38만8000원 → 40만2000원
- 채권 시장 수급 여건 개선 → 회사채·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확대
-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
-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미래대비 체질개선

-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노동 근로 시간, 임금 체계 개편, 교육 대학 규제 개선
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토대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기 운용 개선 마련
-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 발행한도 외 차환채 한도 인정비율 축소
- 전기차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배터리 안전 역량평가 도입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반도체·해외건설·관광 등에 정부 총출동... 수출·수주 '드라이브'

무역금융 규모 260조 '역대최대'
연간 500억 韓 민관합동패키지 지원

국가별 수요 분석 원천 세일즈 나서
신기술·일상·시장 신성장 4.0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

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환율연선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형 대응한다.

연간 500억 韓 해의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 신도시'(5000억 韓),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 韓), '폴란드 신공항'(74억 韓)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

- 1 신기술 미래 분야 개혁
 - ① 미래형 모빌리티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UAM 상용
 - ② 독자적 우주탐사 우주항공청 신설(2023),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 ③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개발,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등 양자센서 개발
 - ④ 미래로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 ⑤ 에너지 신기술 SMR 표준설계 완성, 수전해 수소생산 기차구축
- 2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 ⑥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구축,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6G 개발·상용화, 2030)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 ⑦ 차세대 물류 부산항 신항(2026) 및 진해신항(2029)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 ⑧ 로봇배송·드론배송 등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 ⑨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
 - ⑩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주거, 식품, 에너지분야 디지털 접목
- 3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 ⑪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 산업 신규 입지, 국가전략기술(조특법)에 디스플레이 포함
 - ⑫ 바이오 혁신 K-바이오 캠퍼브 조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⑬ K-컬처 융합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027), '한국형 칸론' 5개소 조성
 - ⑭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확장현실 기술개발
 - ⑮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 신성장 4.0 전략 추진...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

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외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